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만열



7월 25일부터 서울의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얼마 전에 일본 동경대학으로부터 환수 받은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을 전시하고 있다. 이 왕조실록은 일제 강점 초기인 1913년에 일본인 동양사학자 시라토리(白鳥庫吉)가 당시 조선총독 테라우치(寺內正毅)를 움직여 동경대학 도서관으로 옮겼던 것이다. 그런데 옮긴 지 100년만인 1923년에 동경대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도서관에 소장된 대부분의 장서와 함께 조선왕조실록도 불타버렸다. 다만 당시 도서관 밖으로 대출되었던 왕조실록의 일부가 소실을 면하게 되었다. 그 중 27책이 1932년에 당시 경성제대로 돌아와 규장각 도서관에 편입되었고, 그 뒤에 다시 동경대학 도서관에 반납되었던 47책을 이번엔 돌려받게 된 것이다.

안익-손홍록 두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내장산에 운반하여 병화를 면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우리나라 문화재지킴이의 선구자로서 우리 역사에 길이 기억되어야 할 분들이다.

임진왜란 후 조선정부는 1부 밖에 없는 실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7년간

돌아온 조선왕조실록

의 전쟁 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실록 재간행을 서둘렀다. 1603년부터 3년에 걸쳐 전주사고본을 저본으로 다시 4부의 실록을 더 인쇄하여 춘추관과 태백산·묘향산·마니산 및 오대산 사고에 분산 보관하였다. 이 중에서 마니산에 보관된 것은 원래 전주사고에 보관되어 병화를 면한 것을 그대로 보관하게 되었고, 다른 4부는 새로 인쇄한 것이었다. 오대산사고본은 임진왜란 후 전주사고본을 기초로 새로 간행할 때에 인쇄교정을 위해 찍은 교정지를 모아 재확한 말하자면 '교정쇄 실록'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 이 모두 불타버렸지만, 전주사고의 것만

만 업무들을 빠짐없이 기록 점검하여 연월일순으로 정리했다. 이 시정기(時政記)를 중심으로 뒷날 실록 편찬을 위한 사초(史草)를 만들었다. 왕이 승하하여 춘추관을 중심으로 실록청을 만들어 해당 왕의 실록을 편찬하게 되면 이런 사초들을 총 동원하여 실록을 편찬 간행하였던 것이다.

세종대에 와서 국왕도 실록을 마음대로 볼 수 없도록 제도화되었다. 그런 조선왕조실록을 이제 국민들이 마음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작년 말부터 국사편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history.go.kr 또는 sillok.history.go.kr)를 통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무료로 열람·검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을 환수하기 위해 노력하신 불교계의 인사들을 비롯하여 우리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일제 강점기에 고 내역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일본으로 넘어간 많은 문화재들이 원래의 제 자리로 되돌아오는 문화재환수운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운동은 일본 뿐 아니라 외국장각의 국보급 자료들을 가져간 프랑스를 포함하여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를 상대로 해서 체계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조세 중 부동산세 비중 OECD 3위라니

우리나라의 총 조세 대비 부동산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동산 보유 관련 세부담이 선진국과 비교해 낫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크게 다른 것이어서 '세금폭탄' 부동산 정책에 일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27일 오전 열린 한국국세청포럼의 월례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 발표문에서 "지난 2003년 기준 OECD 주요국의 총 조세 대비 부동산 관련세금의 비중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회원국 가운데 3위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보유세가 낮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며 보유세 실효율을 1%라는 무리한 목표로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나치게 조세 위주로 대응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 이후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기반시설부담금과 재건축개발 부담금 등 '부동산 세금폭탄'이

줄을 이를 예정이다. 부동산 정책에서 조세는 보완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급불균형에서 비롯되며 그 결과로서 투기행위가 성행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급등을 잡는다며 '세금폭탄'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는 잡지 못하고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특히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와 1가구 다주택 보유에 대한 종가세는 주택 공급의 위축을 불러오고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만 불러올 것이 뻔하다.

조세와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2분기 성장률에서 나타나지 않았는가.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선진국과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닌 사실이 밝혀진 이상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전남도-도의회 갈등 정치력으로 풀어나

전남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유감스럽다. 전남도의회는 26일 전남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 등의 심의를 유보하고 폐회하고 말았다.

전남도와 도의회는 도정을 이끄는 양 수레바퀴나 다름없다. 집행부가 도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이자면 의회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건전한 감시와 견제라는 대원칙 아래 서로간 대화와 협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 두 기관이 민선 4기 출범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누구의 잘못을 떠나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갈등의 근본원인이 조직개편안 등에 대한 시각차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도의회는 경제과학환경국의 비례현상,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 규정, 별정직 공무원 정원, 행복마을과의 사업취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전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과학환경국이나 행복마을과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의원 대부분과 박준영 지사가 같은 민주당 소속인 현실에서 갈등의 밑바탕에는 서로의 견제심리가 깔려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의원들은 집행부가 조직개편안에 대해 의회와 사전 조율을 하지 않은데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 발목잡기' 등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한 점을 집중 성토했고 있다.

갈등은 대화로 풀어나간다. 장기화되면 도정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당장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대규모 인사를 비롯 F1 대회, 농어촌 마을 통폐합 등 현안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전남도와 도의회는 정치력을 발휘, 하루빨리 도정을 정상화 하길 바란다. 특히 박 지사는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밑거름'이 아니라 지역의 온갖 갈등을 통합, 조정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진정 전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당당히 의원들 앞에 서서 조직개편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無等鼓

여러 차례 좌절을 겪고도 오뎅이처럼 다시 일어서는 부도옹(不倒翁)의 대명사는 단연 5척 단구의 중국 등소평(鄧小平)이다. 등소평은 1968년 문화혁명으로 권좌에서 밀려나는 등 3번이나 실각과 복권을 되풀이했다. 등소평은 절치부심 끝에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 실용주의에 입각한 개혁과 개방정책을 펴 오늘날 중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

지난 20일 86세를 일기로 타계한 정인영 한라건설 명예회장 역시 '불제어의 부도옹' '황사조 경영인' 등 많은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1980년 신군부에 기업을 강탈당하고 1989년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시련속에서도 오뎅이같이 딛고 일어나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불굴의 투혼을 보여줬기 때문에 붙은 별칭이다.

정 회장의 지칠줄 모르는 도전 정신은 전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됐다. 전국 곳곳을 돌며 입지여건을

조사해 영암군 삼호지구에서 한라조선소를 세워 '조선 전남'의 기틀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허허벌판이던 대불공단에 제지공장을 세웠으며 당시 한라그룹의 주력 계열사였던 만도기계의 전남 이전을 검토하기도 했다. 전남도가 1995년 정 회장을 명예 전남도민으로 추대할 것은 지역경제에 기여한 고인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그런 정 회장이 IMF 파고를 넘는데는 실패했다. 그룹은 해체되고 한라조선소는 현대삼호중공업으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했다. 그러나 정 회장이 전남에 뿌린 씨앗이 전남에 뿌린 씨앗은 이제 꽃을 피우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세계 5위의 조선소로 성장했고 전남 사립부 지역은 새로운 조선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 나는 다만 다시 일어났을 뿐이다" 글쓰기를 좋아했던 정 회장이 남긴 말이다.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앓을 항해 큰 걸음을 내딛었던 고인의 명복을 빈다. /김재필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부도옹(不倒翁)



기고

오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국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전국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집결체. 그것이 바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국체협)'이다. 1991년 창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국 16개시·도협의회와 52개 전국종목별연합회가 결성되어 1천800만명에 이르는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순수 생활체육 단체인 국체협이 정치 싸움으로 비화되어 세간에 입방아에 오

정치인은 회장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승인을 거부하고 든다면 현재 각종 체육단체장을 맡고 있는 여야의 현역의원이 13명(여당 7명, 야당 5명, 무소속 1명)이나 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강두 회장 당선자는 10년 넘게 전국게이트볼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해오면서 생활체육 동호인으로서 열의와 열정을 보여주어 충분한 자격이 검증된바 있다. 문광부의 발표가 있자 언론을 비롯한

'국체협 회장' 정치인이어서 안된다?

르내리는 것은 동호인의 한사람으로서, 광주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10일 김명곤 문광부 장관은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단체의 회장은 부적합하다"며 이강두 국체협 회장 당선자의 취임승인을 거부했다. 당초 문광부의 의지대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회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를 거쳐 6월 26일 대의원총회에서 전체 대의원 153명중 123명의 압도적 지지속에서 이강두 회장 당선자를 선출하였다. 공정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이강두 회장 당선자가 선출 되었음에도

사회 여론은 문광부의 이른바 '정치적 중립성'을 "미숙한 정권의 코드인사"라며 일제히 꼬집고 있으며 네티즌들 또한 정부와 문광부의 부당성을 알리는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등록회원 300만 명이 넘는 국체협 회장직을 야당 인사에게 넘겨주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비판 또한 피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광부가 승인 거부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체협 회원단체 임직원과 생활체육 1,800만 동호인들은 불공정한 처사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법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며, 다양한 형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의 의지를 관철할 수밖에 없다. 부디 문광부가 더 이상의 우를 범하지 말고, 국체협이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승인 거부 방침을 철회하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광주시 생활체육협의회>

동네의원, 진료시간 철저히 지켜주는 자세 필요

많은 의원들이 진료 시작 시간을 오전 9시로 정해두고 있는데, 위엄 등으로 동네 의원을 다니다 보면 9시에 진료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환자의 첫 진료는 통상 20분 이상 지연되기가 일쑤다. 그러면서 의사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 자기가 그 병원 사장이니 자기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시간에 쫓기는 환자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진찰을 받고자 진료 개시 10분 전부터 환자 대기실에 미리 나와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정이 아니더라도 병원은 공공

장소이자 시민과 약속을 지켜야 하는 공간이다. 의사는 정해진 진료 개시시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저히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소한 진료 10분 전에 진료실로 나와 당일 일과 준비에 임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습관적으로 진료 개시를 지연시키는 의원은 공시하고 있는 진료시간표를 고쳐차라리 오전 9시 30분정도로 고쳐놓기 바란다. ▲김석원·광주시 남구 봉덕동

기고

도덕환



우리나라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들은 도서주민들의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현지 생산품을 육지로 운송하는 생활교통의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최근 도서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우리나라 연안의 관광항로 개발로 관광객이 급증, 매년 여객의 수와 화물량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하계 피서철에는 연안 여객의 수가 평소의 2~3배에 달하는 등 연안 여객선 운행량과 운항횟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피서철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서남해안권 즉 목포·완도·여수 지역 등의 목포·여수해양수산청에서 관할하는 도서지역 운항하고 있는 여객선은 56개 항로에 83척이 취항하면서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의 해상교통을 담당하고 있다. 연간 도서민과 관광객 등 승객은 약 509만명 이상이고, 2004년도에도 503만명 이상을 수송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을 정도다. 특히 목포는 우리나라 최대의 도서여객 수송지역이다. 여객선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여객선에 의한 해양사고의 발생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소형 여객선이 충돌, 전복 또는 침몰 등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라도 많은 인명이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손실은 물론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객선을 운항하는 운항자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선박회사의

안전관리 및 관계기관의 안전운항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해양사고의 원인은 ▲승선 선원들의 전문지식 부족 ▲무면허 선원의 항해당직근무 및 항법에 대한 이해부족 ▲운항중 경계 및 주의의무 소홀 등 항해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기본적인 선박조종기술과 장비기술 부족 등 인위적인 운항과실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연안 여객선업체의 열세성 ▲여객선의 노후화와 안전설비 미흡 ▲열악한 항로 여건을 비

다에 있나?"하며 반말도 물었다. 기쁨을 넣어 주는 사람을 주유원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 '어이', '친구'는 기본이고 '야'가 스스럼없이 나온다. '학생', '아가씨'는 그래도 나온편이다. 가장 심한 경우는 '야, 꼬마야'라는 말과 목을 찔러 넣어줄 뻔 뒤 주유원을 가르키며 '만땅' 넣어라, 너 여기서 얼마받냐?'고 물을 때다.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서비스맨이지 하인이나 종, 심부름꾼은 아니다. 이용자들이 자기의 인품을 깎는 행동은 안 해주었으면 한다. ▲이재형·광주시 북구 생용동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2200-500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 A X 222-4277) 조서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안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